

2. 韓·中 經濟關係의 새로운 地平과 有望 協力 분야

- (訪韓 意義 및 成果) 중국의 최고지도자 강택민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韓·中관계는 기존의 經濟 분야 뿐만 아니라 政治·外交분야에서도 긴밀한 共同 協力 관계가 확대됨. 한반도의 停戰 체제 유지 문제, APEC회의에서 공동 보조, 중국의 WTO 가입 문제 등의 국제무대에서 兩國의 협력 체제 구축이 예상됨
- (韓·中 관계의 展望) 韓·中 경제 교류는 수교 이후 3년간 급속히 확대되어 왔으며, 정치·외교분야까지 협력이 증진됨에 따라 경제 협력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양국간의 교역·투자의 확대 이외에도 産業協力 방식의 교류도 활성화될 전망됨

兩國관계는 政治·
外交분야의 협력으로 확대

- (訪韓 意義) 이번 訪韓은 중국 黨/政/軍의 최고 지도자로서 최초의 訪韓
 - 양국관계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분야까지 긴밀화되어 국제무대에서 각별한 협조 예상
 - 특히 訪韓 직전, 한반도 停戰체제 유지 문제에 대하여 한국 입장 지지 표명. 南·北韓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現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중국의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의 현안에 대하여 양국간의 공동 협력이 예상됨

경제교류의 확대
및 産業協力 진전에 합의

- (訪韓 成果) 政治·外交분야의 공조 체제 구축 및 이에 따른 經濟協力の 가속화 전망
 - 중국의 5개 SOC 건설에 7,400만 달러의 대외경제 협력기금 추가 지원 및 기금 이자율 인하 적용
 - 양국간 경제 懸案 논의
 - 한국은 투자환경의 투명성 보장 요구
 - 중국은 무역역조 개선 및 WTO 가입 협조 요구
 - 교역확대를 위한 한·중 輸出入 표준계약서 체결 합의
 - 중형항공기, 자동차 부품, 고화질TV, 차세대 교환기, 원전 개발 등의 5개 우선 산업협력부문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실무 부서 운용 합의

修交 3년만에 중국은 제3위 交易國, 제1위 海外投資對象國으로 부상

○ (現況) 韓·中 경제 교류의 급속한 확대

- 수교 3년만에 美·日에 이어 제3위 교역국으로 부상
 - 올해 9월말 현재, 對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47% 증가한 65억 달러, 수입은 35% 증가한 54억 달러로 올해 總교역량은 160억 달러 예상. 주요 수출품은 기계류, 화공제품, 직물, 플라스틱 등. 주요 수입품은 아연광, 합성연료, 시멘트, 의류, 신발등의 1차산품 및 경공업품
- 교역확대와 함께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 부상
 - 올해 9월말 현재 對中 투자는 허가 건수로는 2,500만 건에 24.2억 달러 상당. 섬유, 완구 등의 경공업분야의 소규모 투자로부터 전자, 시멘트, 자동차 부품 등으로 투자 규모 확대 및 투자 분야 다양화 추세
-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의 배경
 -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구조의 상호 보완성
 - 한국 경제의 구조적 조정 필요성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으로 중국 경제의 지속적 고성장

産業內 무역 및 産業協力방식의 교류 확대 전망

○ 향후 對중국 경제 관계 전망과 유망 협력부문

- (산업협력의 구체화) 5개 우선 협력 산업 부문에서 구체적 협력 진전 예상
 - 산업 협력 방식은 양국의 경제 교류가 단순한 교역, 투자에서 벗어나 자본과 기술의 결합, 인적 자원의 교류로 확대됨을 의미
 - 자동차산업의 경우, 부품 합작 투자와 전문 인력 교류등에 합의. 중국은 이 부문의 최대 투자국임. 중국은 96년부터 완성차의 합작 진출을 선호하고 있음
 - 중형항공기 개발에서는 합작 지분에 합의했으며, 향후 최종 조립장 및 외국기술 참여사 선정 등

沿岸지역 임금 인상 등 投資環境 변화 및 중국 産業政策의 변화 예상

- 의 어려운 결정이 남아 있음. 항공산업에서는 최종조립장의 보유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이의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양국간 교역에서도 산업내 무역 증대 예상
- (중국 정책의 변화) 중국의 「9·5계획」에 의하여 산업정책 및 외자도입 정책의 변화 예상
- 중국의 개혁, 개방 기조는 불변이며 WTO 가입을 위한 關稅引下 등으로 교역조건 개선 예상. 외국자본의 유치는 계속될 것이나, 외자도입에 산업정책을 연계할 것은 거의 분명함
- 향후 경제정책의 골격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내륙지역의 이전유도, 자국내 공급과잉 상태인 일부 家電산업 부문에서 중복투자의 불허용, 기간산업 부문도 개방하여 선진기술 도입 선호, 서비스·유통분야에서의 개방 확대,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중점 추진 등을 포함함. 경제특구 진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는 단계적 축소 예상
- (기업의 대응 방안) 사실상 투자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인식하고 투자 진출 목적에 따라서 기존 전략을 재점검해야 함
- 低賃을 이용하여 생산기지 移轉이 목적인 노동집약적 부문의 기업들은 연안위성도시 혹은 내륙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할 만함. 내륙으로 移轉時 해외수출 보다는 내수시장을 목표로 해야 함
- 중점 육성산업의 경우, 기술이전을 수반하면 외자기업의 문호는 더욱 개방될 것임. 歐美 및 일본 기업들은 기술이전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의 선점에 주력함
- 중국의 광대한 내수 시장을 목표로 진출하려면 중국 경제 성장의 속도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이 장 규)

對中진출의 목적에 따라서 投資環境 및 정책 변화에 적절한 적응 필요